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김용현**
k033232@daum.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 2. 선행연구 검토 | 5. 결론 |
| 3.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최근 동향 | |

主題語: 일본(Japan),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ies), 생활공해(Living pollution), 산업공해(Industrial pollution),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s)

1. 서론

과거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로 분류되었고 특히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줄곧 추진해온 산업구조의 근대화화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1970년대 전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바 있다. 특히 자연환경 오염과 공해문제로 집약할 수 있는 산업형 환경문제는 산업근대화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후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공해는 선진국의 부산물이기도 하였다.

산업공해와 생활공해를 경험한 일본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준비를 다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환경문제 법률은 제정되어 있었지만 산업공해로 인하여 급속하게 악화되는 환경파괴를 당시의 규제로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공해는 당시 국제사회가 지구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로 인류에 의한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계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심각성과 맞물려 환경문제를 단순한 국내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겪어내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413-B00011)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또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는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이러한 공헌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에 많은 희망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자국의 환경정책도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오늘날 EU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에 있어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독자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최근의 환경규제가 이전의 지구환경을 배려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인류의 공통적인 목표와는 별개로 환경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추진하려는 각 국들의 속셈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수입품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래의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규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 규제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규제의 대두 속에 일본의 환경정책의 변화와 일본정부의 의식변화를 다루고 있다. 종래의 선행연구는 일본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규제의 역사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또는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환경규제와 국제공헌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규제와 기존의 환경규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된 논문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일본의 장기적인 불황과 ‘동일본대재해’ 이후에 급변하는 일본정부와 정책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연구나 한국연구자들의 논문은 거의 자국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로 기업이나 특정산업의 해결방안에 중점을 둔 나머지 총체적인 문제해결 방안까지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환경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환경규제의 대두 속에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일본 국내외의 모든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명확히 하여 일본 환경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일본 국내 정책적 관심에서의 접근

飯島正(1995)는 일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공해나 생태계 등과 관련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60년대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¹⁾ 당시의 일본 국내 상황은 패전과 함께 잣더미 위에서 재기를 꿈꾸며 경제발전에 전념하던 시기로 森道哉(2002)의 지적처럼 허허벌판에서 시작하여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의 공업화를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대가로 산업발전의 부작용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²⁾ 때문에 일본정부는 환경정책을 도입하여 각종 규제를 통해 대책마련에 부심하지만 환경정책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러나 森道哉(2000)는 종래의 선행연구에서의 환경연구부분은 경제학이나 사회학 또는 법률학 등에서의 정책연구가 정책 공방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환경정책에 관한 분쟁과정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방 당사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분석 및 과정을 검토하였다.³⁾

한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古河幹夫(1998)은 심각한 환경오염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지만 기존의 환경기준으로는 확산되는 환경오염을 제지시키기에 역부족으로 강물의 흐름을 두 팔로 막는 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일본의 환경정책이 이와 같은 산업공해로 인해 유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공통의 의견으로 大橋敏二郎(2011)는 산업공해를 비롯한 이러한 환경문제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의 환경정책 즉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진은 크게 3종류로 분류하여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⁵⁾ 먼저 1950~1970년대는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산업형 공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시기, 그리고 1970~1980년대는 경제수준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시민생활도 풍족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형공해의 시기,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류에 의해 발생한 환경 부담이 지구의 처리능력을 초월하여 심각성이 대두된 지구환경문제와 이와 관련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정책 규제강화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되었다.

1) 飯島正(1995)「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基本法」『国際関係紀要』第4巻 第2号, アジア大学, p.10

2) 森道哉(2002)「環境政治における政府の政策選好」『政策科学』第10巻 第1号, 立命館大学, p.131

3) 森道哉(2000)「環境政策をめぐる『紛争』の過程と構造」『政策科学』第8巻 第1号, 立命館大学, pp.159-167

4) 古河幹夫(1998)「環境問題と環境政策」『調査と研究』第29巻 第1号, 長崎大学, p.105

5) 大橋敏二郎(2011)「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ビジネスの展開」『日本情報経営学会誌』第31巻第4号, 日本情報経営学会, pp.43-44

일본 환경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정치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喜多川進(2011)는 환경정책사의 연구를 통하여 환경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특징과 내용을 상세히 비교하여 환경정책의 변천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

일본의 경우 환경정책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환경청이다. 이는 일본의 환경정책에 있어 환경청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森道哉(2001)는 일본의 환경청은 공해방지 등에 관한 계획에서 실시까지 모든 권한을 일원화하여 장악하고 있으며 기관 스스로가 실시업무를 포함한 환경관련 전반적인 업무의 종합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은 단순한 공적기관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환경청’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또한 이러한 환경청의 권력구조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환경청에서 주도하는 환경정책은 환경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역학관계, 즉 ‘정치적 기회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村井恭(2000)의 연구는 매우 차별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다.⁸⁾

한편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의 전 지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緒方俊則(2008)는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은 지자체와 정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법률과 조례가 정비되어 있다고 역설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사례별 연구를 통해 광역도시와 지방도시 간에는 권한과 역할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⁹⁾ 이와 같은 지역 간의 권력 차이가 경우에 따라 환경정책 기준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 예를 들면 1970년 전후의 동경도의 환경 기준은 중앙정부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제되는 사례도 있었다.¹⁰⁾ 遠藤真由美와 服部勇(2008)는 환경정책에 관한 광역도시와 지방도시의 지역 간의 격차는 매우 큰 상태로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받고 있지 못하며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환경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6) 喜多川進(2011)「環境政策史研究の構想-源流・方法・意義」『EAEH2011』環境政策史研究会, Vision and Significance in Environmental Policy History 報告論文, pp.3-31

7) 森道哉(2001)「環境政策をめぐる‘紛争’の変容」『政策科学』第8巻 第2号, 立命館大学, pp.139-147

8) 村井恭(2000)「1990年代の日本政治における環境庁の政治的機会構造」『日本公共政策学会年報 2000』日本公共政策学会, pp.5-13

9) 緒方俊則(2008)「日本の環境行政と自治体の役割」『自治制度及び運用実態情報海外紹介等支援 事業』No.7, 比較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pp.5-20

10) 古河幹夫(1998), 전게서, p.105

11) 遠藤真由美·服部勇(2008)「福井県内自治体が策定した環境基本計画に関する研究」『福井大学地域環境研究教育センター研究紀要』日本海地域の自然と環境15, 福井大学, pp.53-64

2.2 글로벌 지구환경 관점에서의 접근

일본의 환경정책 연구는 주로 일본 국내의 정책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 지구환경의 관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구 자연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급격하게 증폭하기 시작한 1990년대 전후부터 일본 환경정책이 국제사회를 염두에 둔 정책과 함께 선행연구도 글로벌 지구환경을 포함한 연구가 매우 증가하게 되었다.

遠藤真由美(2008)등은 일본정부의 글로벌 환경보전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환경기본법’과 1994년 12월에 책정된 ‘환경행동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1967년7월 제정)과 자연환경보전법(1972년6월)의 내용을 망라하여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한 글로벌적 관점에서 시행된 정책이라고 한다.¹²⁾ 그리고 이러한 일본정부의 강한 의사표현의 배경에는 飯島正(1995)가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 인류가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개별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³⁾ 伊藤美佐子(2006)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훌륭한 사회공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을 배려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⁴⁾

한편 지구온난화 문제와 자원을 중심으로 연구된 青木健(2007)의 논문은 일본의 경우 ‘탈 온난화 사회’와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 되어 지구환경의 부하능력에 맞는 경제사회 재구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⁵⁾ 岡本誠(2006)의 경우는 수질과 관련한 지구 환경연구를 통하여 수질의 악화는 물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각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⁶⁾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가스와 관련하여 일본의 배출권거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辻元政雄(2005)은 배출권거래의 근거와 의의를 설

12) 遠藤真由美·服部勇, 전게서, p.53

13) 飯島正(1995), 전게서, p.10

14) 伊藤美佐子(2006)「環境重視の姿勢を強める日本企業」『Topic Report』JETRO, p.1

15) 青木健(2007)「資源枯渇:もうひとつの脅威」『国際貿易と投資』No.69, 国際貿易投資研究所, pp.121-122

16) 岡本誠(2006)「水環境保全の実態と今後の課題」『経済政策研究』通巻 第2号, 香川大学, pp.168-183

명하면서 이를 통한 노력이 온실효과가스의 억제와 일본이 목표로 하는 삭감목표를 기능하게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¹⁷⁾

민주당은 1955년 이후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과 교체되어 2009년부터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의 수상이었던 하토야마(鳩山)씨는 UN의 연설에서 1990년대비로 202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를 25%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반응과 기능성을 연구한 塚越由郁(2009)는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공약을 실천하여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의 적극적인 확대와 개발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기술이노베이션 사례와 확대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⁸⁾ 이 밖에도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환경정책 관련 연구는 1990년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도 지속될 것이다.

2.3 환경규제 관점에서의 접근

한편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선행연구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과 지구환경을 포함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해나 생태계 파괴 등의 공통적인 문제해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지구 환경과의 공존과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환경규제에 대한 각국들의 정책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즉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은 이미 산업공해와 생활공해를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축척된 정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横山彰(2008)의 지적과 같이 과거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즉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를 확보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사업체나 종업원 등의 규모는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¹⁹⁾ 또한 환경규제의 강화는 시대적인 요청임으로 이것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科野宏典(2005)는 환경규제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을 둔 새로운 방식의 경영 즉 ‘신 환경경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리고 天谷永(2007)가 환경규제를 경쟁전략으로서 활용하

17) 辻元政雄(2005)「我が国排出権取引の展望」『商学研究科紀要』第61号, 早稲田大学, p.164

18) 塚越由郁(2009)「新政権は環境革命をおこすのか」『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みずほ総合研究所, pp.7-14

19) 横山彰編(2008)『温暖化対策と経済成長の制度設計』勁草書房, p.226

20) 科野宏典(2005)「環境新時代に求められる企業価値を高める‘新環境経営’」『知的資産創造』野村総合研究所, pp.6-17

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관성의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새로운 경쟁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²¹⁾ 이와 같은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은 기업의 사회공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연구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松本力也(2011)는 환경경영전략과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환경경영 전략은 이해관계자와의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시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과 약진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²²⁾

이상과 같이 일본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일본의 정책적 관점과 글로벌 지구환경 관점 그리고 환경규제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변화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의 환경규제는 자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단순한 환경정책의 개념이 아니라 무역장벽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관점을 포함시켜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최근 동향

3.1 일본 환경정책의 형성과 시대적 상황

일본에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다. 당시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시기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근대화와 급속한 도시화를 추진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양수질대기의 오염은 심각해졌고 또한 대도시의 건설은 생활공해를 급속도로 확산시켰다.²³⁾

21) 天谷永(2007)「環境規制と競争戦略」『創価経営論集』第31巻 第1・2合併号, 創価大学, pp.23-32

22) 松本力也(2011)「環境経営戦略と社会貢献活動に関する一考察」『日本近代學研究』第32輯, 한국일본근대학회, pp.306-307

23) 古河幹夫(1998), 전게서, p.105

일본의 첫 환경관련 백서인 당시의 ‘공해백서’는 좁은 국토 안에서 국토이용계획에 있어 지리적 그리고 자연적 조건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발전만을 추진한 것이 심각한 공해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에 가까운 언급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심각해 졌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일본정부로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무마시키고 더 이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였다.²⁵⁾

그러나 당시의 법적 정비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였다. 예를 들면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급속도로 악화되는 대기와 수질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빈약하였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동경도의 경우는 독자적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정부의 환경 규제보다 엄격한 규제를 목적으로 1969년에 ‘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²⁶⁾ 이와 같이 공해와 관련한 환경대책은 당시의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최대 정책적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치계 전체가 공해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시기였다. 특히 공해문제가 정점에 도달한 1970년대는 ‘공해국회’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당시의 일본정당들은 공해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실현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였다.²⁷⁾

〈표 1〉 일본의 환경관련 문제와 시대적 배경

시대	주요 문제	시대적 배경
1950~ 1960년대	산업형 공해 국민 건강	급속한 고도경제성장 산업형 공해로 인한 국민건강 심각성 대두
1970년대	법의 정비 규제 강화	환경파괴속도와 법의 기준 격차 법의 재정비와 규제의 대폭 강화
1980년대	생활형 공해 지구환경문제	선진국 수준의 생활과 생활형 공해의 대량발생 선진국 중심으로 지구환경 문제 표면화
1990년~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논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논의 본격화 선진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편성
2010년 이후	환경규제와 무역장벽	자연환경 배경으로 환경규제 강화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

자료: 필자 작성

24) 環境省(1969)『公害白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44>.

25) 森道哉(2002), 전게서, p.131

26) 古河幹夫(1998), 전게서, p.105

27) 森道哉(2008)「戦後日本の環境政治と大企業の権力」『香川法学』第27巻 第3号, 立命館大学, pp.67-68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환경문제는 종래의 공업화에 의한 산업형 공해문제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형 공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즉 폐기물의 매립 및 매립지의 문제와 불법투기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의한 대기오염 등 도시생활형 환경문제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²⁸⁾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제품의 수명은 급속하게 단축되는 선진국의 이른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파괴라는 난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시키고 재이용과 리사이클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²⁹⁾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규제강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산업공해 문제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발생한 생활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강력한 환경규제는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였다. 즉 일본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결과는 실증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환경기술에 관한 이노베이션활동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³¹⁾

이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산업공해와 생활형 공해에 봉착하게 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규제 강화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환경문제를 극복하여 자연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구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3.2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과 국제사회

일본은 1990년대는 접어들면서 종래의 산업형 공해와 생활형 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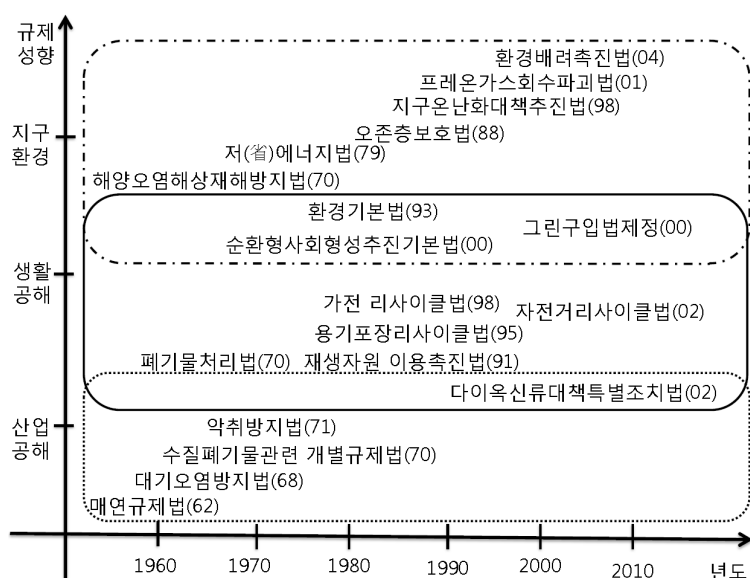
28) 金炳國·李秀澈(2009)「日韓の環境政策と環境行財政制度」『名城論叢』第10巻 1号, 名城大学, pp.87-88

29) 山本啓介·川邊眞敬·松尾昭彦(2010)「循環型社会構築に向けてのエコタウン事業」『社会情報学研究』Vol.6, 広島文化学園大学, p.170

30) 有村俊秀·杉野誠(2009)「環境規制の技術革新への影響」『研究技術計画』第23巻3号, 研究技術計画学会, p.201

31) 枝村一磨(2010)「環境規制と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活動」『知財研紀要2010』知的財産研究所, pp.1-4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환경에 관한 의식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이며 자연 생태계도 고유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국제사회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및 생태계파괴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환경파괴에 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하였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³²⁾



주: 탄소세는 2011년 도입예정이었으나 동일본대재해로 연기.

자료: 각종 법안을 참고로 작성.

〈그림 1〉 일본의 환경관련 법의 정비와 규제성향

먼저 일본이 국제사회를 의식한 시기를 파악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일본정부가 196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환경관련 백서이다. 환경백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경우 백서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이다.³³⁾ 일본은 환경관련 백서

32) 渡辺好章(2001)「循環型経済システム社会における企業マーケティング」『経済経営紀要』第19巻 第1号, 城西大学, p.99

33) 일본의 환경관련 백서는 시대에 따라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 백서가 발간된 1969년~1971년까지는 공해백서로 발간되었고 이후 1972년~2006년까지는 환경백서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은 환경·순환형사회백서로 그리고 2009년부터는 환경·순환형사회·생물다양성백서라는 이름

를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데 국제동향이 백서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972년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 국내 상황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산업공해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고 자국의 공해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시기라 당시의 환경정책이 지구환경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 된다. 그 시기의 주요 환경관련 법을 보면 대기오염방지법(1968), 악취방지법(1971)과 같은 산업공해 관련법이나 폐기물처리법(1970)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구환경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당시의 선진국들이 안고 있었던 공통적 사회문제였던 산업공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가 이 시기에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해백서’가 ‘환경백서’로 이름이 변경된 1972년의 백서에서는 환경문제가 국내문제를 넘어 선진국의 기술적인 진보와 공업화로 인해 환경파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³⁴⁾ 즉 선진국에 의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일본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는 정도이지 국제사회에서 공헌해야 한다는 의지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까지의 일본은 국제사회를 의식하기 시작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연환경에 관한 현황파악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환경정책의 관점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선진국으로서 환경에 대한 공헌의식을 명확하게 천명하기 시작한다. 1982년의 환경백서에는 국제협력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83년에는 국제화 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라는 내용을 통해 국제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국제조약에 근거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환경보존을 배려한 경제협력 등을 명확히 명시하기 시작하였다.³⁵⁾ 즉 일본이 지구환경과 관련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과 역할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자각과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일본의 진취적인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 환경정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 및 가시화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공조를 주도하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환경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993년 11월에 시행된 ‘환경기본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환경기본법 제1장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면서 문화적인 생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이와 함께

으로 발간되고 있다.

34) 環境省(1972)『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47>

35) 環境省(1982)『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57>

環境省(1983)『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58>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³⁶⁾ 이후 일본은 지구환경을 착목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1998),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2000), 그린구입제정법(2000), 프레온가스회수과피법(2001), 환경배려촉진법(2004) 등을 제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오늘날의 지구환경과 경제발전의 국제적 기본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착시키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또한 환경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오늘날 일본이 환경 분야의 선구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환경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환경정책을 통해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새로운 환경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서 기업들의 다양한 환경시책이 마련되어 실천되고 있다.³⁷⁾

따라서 최근의 보호무역 성격의 환경규제의 대두가 충분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일본기업에게는 비즈니스의 찬스로 작용하는 것이다.³⁸⁾ 특히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의 롤모델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환경규제가 자동차를 비롯하여 전자·전자섬유 등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³⁹⁾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⁴⁰⁾

3.3 일본 환경정책의 정체와 환경규제

최근의 일본의 환경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의 대두와 일본정부의 행동의 변화다. 즉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⁴¹⁾ 따라서 최근의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

36) 環境基本法, 第1章 第1条.

37) 김양태(2012)「일본의 그린 물류정책과 물류단체 및 기업의 친환경물류 사례」『日本近代學研究』第36輯, 한국일본근대학회, p.489

38) 田中伸昌(2009)「オバマ新政権のエネルギー環境政策は日本企業に機会になるか」『WING21 いばらぎ』茨城県中小企業振興公社, pp.8-9

39) 최동호(2010)「EU의 배기가스규제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제상학』제25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p.260

40) 변재웅(2006)「EU 환경정책과 한국기업의 대응에 관한 연구」『유럽연구』제23호, 한국유럽학회, p.35

41) 김용한·이용근(2012)「녹색장벽의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관한 연구」『국제상학』제2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p.221

적 동향은 일본에게도 매우 민감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본정부의 입장은 국익과 지구환경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쌍방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⁴²⁾ 또한 환경문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이런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전략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지만 사실은 일본 정책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일본사회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국익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거는 행위는 적어도 근년의 일본정치계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일본이 사양하거나 소극적인 발언으로 주위의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해 자국의 희생을 동반하거나 불이익 감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최근의 일본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요인분석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모색되고 있다.⁴⁴⁾ 물론 이러한 일본경제 위기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가운데 일본의 환경관련 산업만큼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로 항상 세계를 리드해 왔다.⁴⁵⁾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 환경대국 일본이 정책혼선과 독점구조 및 글로벌 환경의 대기업 견제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⁴⁶⁾ 일본의 장기불황이 결국 일반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해’는 일본의 환경정책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하여 세계의 환경대책을 주도하며 2009년에는 하토야마 당시의 수상이 유엔에서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효과가스를 25% 삭감 한다⁴⁷⁾는 국제적인 공약을 천명한 상태이다. 그러

42) 環境省(2012)『環境基本計画』, p.21

43) 環境省(2012), 전제서, p.21

44) 예를 들면 金榮憲·深尾京司·牧野達治(2010)「失われた20年」の構造的な原因」『PDP』10-P-004 또는 山口公生(2010)「失われた20年、一体何を失ったのか」『時評』第一生命, 2010年9月号 등이 있다.

45) 枝村一磨(2010), 전제서, p.1

46) 정호성·김득갑(2009)「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SERI경제포커스』제253호, 삼성경제연구소, p.11

47) マイケル・J・グリーン/チャールズ・W・フリーマン三世/エイミ・E・シーライト著/中野裕子 監訳(2011)『戦略国際問題研究所グリーン・ドラゴンズ-アジア太平洋主要国の気候変動のポリティックス(日本語版)-』21世紀政策研究所, p.8

나 이러한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주장은 동일본대재해를 기점으로 공중해체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이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환경정책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일본이 글로벌 환경규제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와 같이 국제공헌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거나 지구환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조율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장기적인 불황과 함께 동일본대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여력이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라면 일본은 자국의 환경관련 기술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국의 환경정책도 더욱 강화시켜 환경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 예상된다. Kotra⁴⁸⁾가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환경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강화를 통하여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장벽을 쌓고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다.

4.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4.1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

일본의 환경정책 특징을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확인해진다. 따라서 일본의 환경정책을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1.1 일본 환경정책의 긍정적 특징

첫째, 일본의 환경정책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일본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공해문제에 봉착하였다. 특히 1960대 이후부터의 산업공해는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1970년을 공해국회라고 명명할 정도로 산업관련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생활

48) Kotra(2010)『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Global Issue Report 10-002, p.74

의 풍요는 생활공해라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고 좁은 국토의 일본은 자국의 생태계를 지키고 시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관련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질서 의식이 강한 일본에서 추진된 환경규제는 매우 강력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시민들의 도시환경은 물론 일본의 자연생태계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환경정책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켰다.

오늘날 일본은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대국으로 환경기술 관련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기업 제품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원래부터 지구환경을 의식하고 환경을 비즈니스로 의식한 것은 결코 아니다. 1970년 이후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증폭하게 되지만 일본의 기업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기업의 비즈니스로 승화시키는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일본의 기업들에게 환경관련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킨 동기는 규제에 있었던 것이다. 강력한 환경규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환언하면 일본 기업의 환경기술은 환경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환경정책은 일찍부터 지구환경과 국제공헌을 의식하였다.

일본이 지구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의 일본은 이전부터 발간한 공해백서를 환경백서로 변경해가며 지구환경과 관련한 현황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며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지구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정립은 일본의 역할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일본이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으로 지구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참여와 협약이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넷째, 일본의 환경정책은 글로벌 환경규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근의 글로벌 환경규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들은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생산 밖에 없다. 즉 뛰어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규제에도 저촉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축적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저 가격대의 환경기준 미달의 경쟁업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 산업계의 동향을 보면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규제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4.1.2 일본 환경정책의 부정적 특징

첫째, 환경정책이 동요되고 있다.

과거 일본의 환경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즉 산업공해와 생활공해의 극복 및 지구환경의 보호였다. 일본의 환경관련 백서의 명칭 변화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처음 환경관련 백서가 발행된 것은 1969년으로 공해백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이후 1972년부터는 환경백서라고 하고 2007년부터는 환경·순환형사회백서 그리고 2009년 이후는 환경·순환형사회·생물다양성백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즉 환경에 관한 관심을 점차 지역에서 국가 그리고 인류 및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일본의 산업계에는 매우 부담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정부는 자국의 국내적인 요인을 이유로 과거의 일관된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정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재검토도 추진 중이다. 과거 일본은 오일쇼크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계를 포함한 학계와 정치계가 하나가 되어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정부는 지혜를 짜기 보다는 환경규제 완화 등의 안이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쌓아온 환경정책이 중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환경정책의 퇴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둘째,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타인이나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사항이다. 특히 개별 국가 또는 국제적 단체기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과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물론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만을 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본심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어도 그러한 본심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수치 문화’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타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욕을 부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은 국익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걸고 외교에 임한다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본에 어떠한 경제적 득실을 가져다 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일본 고유의 성격과는 맞지 않으며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과거와 다른 외교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공헌이라는 책임의식이 저하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자국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구환경과 관련해서는 자국의 위험부담을 높여가면서도 국제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자기희생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일본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교토의정서와 같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의 채택은 물거품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동일본대 지진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자국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교토의정서를 추진해 온 국가가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이 불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동참해 오던 국가들에게 절호의 탈퇴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공헌의식 저하는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공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신뢰로 이어졌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는 1990년 이후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국제사회에서의 공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를 삭감한다는 공약을 UN(2009년: 하토야마 전 수상)에서 하는 등 일관해서 성실성 있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약속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실효과 삭감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조차 아직 8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철회를 시사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와 같은 자국이 주도한 국제협약조차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은 일본이 구축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큰 실망을 안겨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4.2 일본 환경정책의 시사점

4.2.1 글로벌 환경규제에 의한 보호무역과 분쟁에 대비

현재까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표면적인 충돌이나 WTO를 통한 제소의 움직임은

보고된 것이 없다. 이는 환경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명분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당하는 국가도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설령 제소한다고 해도 WTO가 기존의 보호무역에서의 무역장벽과 같은 취급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규제의 움직임은 경제수준과는 관계없이 향후 더욱 확산될 것이고 개별 국가 간의 환경을 빙자한 무역충돌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환경규제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주시하고 보호무역과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적인 제도를 완비시켜 두어야 한다. 즉 글로벌 환경규제의 확산으로 인한 보호무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를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한다.

4.2.2 국제분쟁 조정 전담반 구축

환경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의 대두는 가까운 미래에 국제분쟁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쟁 구도로 돌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해결 방법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의 경우는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전제로 한 보호무역을 실시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호무역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특성에 맞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별·지역별 전담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반은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독자적 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지식과 함께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를 충분히 인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4.2.3 기업의 기술혁신을 의식한 환경규제를 실시

일본의 환경정책과 이를 통한 강력한 환경규제는 당면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개척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환경을 지키고 일본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이 밖에도 일본 기업의 환경기술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언하면 엄격한 환경규제는 기술의 진화를 유도하고 기술진화는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 단순히 규제와 제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제시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염두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환경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환경규제 법률은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지표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4.2.4 환경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이란 좁게는 국가와 국민들과의 약속이자 넓게는 전 인류 및 지구와의 약속으로 향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번 제정된 정책은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 설령 돌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책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백지화 된다면 아무도 정책을 신용하지 않을 것이며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우회를 하더라도 정책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제도화하고 일단 제정된 법률은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2.5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충분한 논의와 신중이 필요

약속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약속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며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로 그 행위에 대한 후유증은 매우 크고 심각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공언이나 약속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전 검증을 거친 후에 체결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라면 더더욱 신중한 발언이 요구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말아야 한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대표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약속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사정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문제이며 대외적인 약속은 국제사회의 문제임으로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문제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4.2.6 환경기술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을 추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환경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11년의 경제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경제규모는 세계15위이며 수출은 세계7위에 해당한다. 한국이 선진국이나 아니냐의 논의는 접어 두더라도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도 크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헌도는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자국의 경제발전에는 전력을 다하지만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국제사회에서의 공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서 가는 경제력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인류를 위해 자국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존경을 유도하며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5. 결론

최근의 글로벌 환경규제는 명목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쟁국가와 지구환경에 적극적이지 못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규제는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공존이라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인 만큼 적극적인 관여를 기피하며 오히려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을 염두해 두고 일본의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 먼저 일본의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환경정책이 매우 엄격하며 환경에 관한 규제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엄격한 환경기준은 일본기업의 환경기술 이노베이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일본의 환경정책은 일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의식한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공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고, 일본의 이러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규제는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최근의

일본 환경정책은 경기적인 요인과 맞물려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와 함께 일본 국민성과는 맞지 않는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공헌 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근년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마저 재검토에 들어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글로벌 환경규제와 일본의 환경정책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환경규제는 반드시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무역 분쟁에 대비하여 사회적 시스템과 법적 제도를 완비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분쟁 조정 전담반 구축으로 향후 발생할 국제분쟁에 대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규제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한번 실시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는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공헌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 분야에서 이러한 공헌이 능동적으로 실시되면 국가의 브랜드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익한 분쟁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參考文獻】

- Kotra(2010)『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Global Issue Report 10-002, p.74
 김양태(2012)「일본의 그린 물류정책과 물류단체 및 기업의 친환경물류 사례」『日本近代學研究』第36輯, 한국일본근대학회, p.489
 김용현·이용근(2012)「녹색장벽의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연구」『국제상학』제 2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p.221
 변재웅(2006)「EU 환경정책과 한국기업의 대응에 관한 연구」『유럽연구』제23호, 한국유럽학회, p.35
 松本力也(2011)「環境経営戦略と社会貢献活動に関する一考察」『日本近代學研究』第32輯, 한국일본근대학회, pp.306-307

- 정호성·김득갑(2009)「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북병」『SERI 경제포커스』제253호, 삼성경제연구소, p.11
- 최동호(2010)「EU의 배기가스규제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제상학』제25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p.260
- 青木健(2007)「資源枯渇:もうひとつの脅威」『国際貿易と投資』No.69, 国際貿易投資研究所, pp.121-122
- 天谷永(2007)「環境規制と競争戦略」『創価経営論集』第31巻 第1・2合併号, 創価大学, pp.23-32
- 有村俊秀 杉野誠(2009)「環境規制の技術革新への影響」『研究技術計画』第23巻 3号, 研究技術計画学会, p.201
- 飯島正(1995)「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基本法」『国際関係紀要』第4巻 第2号, アジア大学, p.10
- 伊藤美佐子(2006)「環境重視の姿勢を強める日本企業」『Topic Report』JETRO, p.1
- 枝村一磨(2010)「環境規制と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活動」『知財研紀要2010』知的財産研究所, pp.1-4
- 遠藤真由美 服部勇(2008)「福井県内自治体が策定した環境基本計画に関する研究」『福井大学地域環境研究教育センター研究紀要』福井大学, 日本海地域の自然と環境15, pp.53-64
- 岡本誠(2006)「水環境保全の実態と今後の課題」『経済政策研究』香川大学 通巻 第2号, pp.168-183
- 大橋敏二郎(2011)「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ビジネスの展開」『日本情報経営学会誌』第31巻第4号, 日本情報経営学会, pp.43-44
- 緒方俊則(2008)「日本の環境行政と自治体の役割」『自治制度及び運用実態情報海外紹介等支援事業』No.7, 比較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pp.5-20
- 科野宏典(2005)「環境新時代に求められる企業価値を高める「新環境経営」」『知的資産創造』野村総合研究所, pp.6-17
- 環境省(2012)「環境基本計画」, p.21
- 喜多川隼(2011)「環境政策史研究の構想・源流・方法・意義」『EAEH2011』環境政策史研究会, Vision and Significance in Environmental Policy History 報告論文, pp.3-31
- 金炳國 李秀澈(2009)「日韓の環境政策と環境行財政制度」『名城論叢』第10巻 1号, 名城大学, pp.87-88
- 田中伸昌(2009)「オバマ新政権のエネルギー環境政策は日本企業に機会になるか」『WING21 いばらぎ』茨城県中小企業振興公社, pp.8-9
- 塚越由郁(2009)「新政権は環境革命をおこすのか」『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みずほ総合研究所, pp.7-14
- 辻元政雄(2005)「我が国排出権取引の展望」『商学研究科紀要』第61号, 早稲田大学, p.164
- 古河幹夫(1998)「環境問題と環境政策」『調査と研究』第29巻 第1号, 長崎大学, p.105
- マイケル・j・グリーン/チャールズ・w・フリーマン三世/エイミ・E・シーライト 著/中野裕子監訳(2011)『戦略国際問題研究所グリーン・ドラゴンズ-アジア太平洋主要国の気候変動のポリティクス(日本語版)-』21世紀政策研究所, p.8
- 村井恭(2000)「1990年代の日本政治における環境庁の政治的機会構造」『日本公共政策学会年報2000』日本公共政策学会, pp.5-13
- 森道哉(2000)「環境政策をめぐる「紛争」の過程と構造」『政策科学』第8巻 第1号, 立命館大学, pp.159-167
- 森道哉(2001)「環境政策をめぐる「紛争」の変容」『政策科学』第8巻 第2号, 立命館大学, pp.139-147
- 森道哉(2002)「環境政治における政府の政策選好」『政策科学』第10巻 第1号, 立命館大学, p.131
- 森道哉(2008)「戦後日本の環境政治と大企業の権力」『香川法学』第27巻 第3号, 立命館大学, pp.67-68
- 山本啓介・川邊眞敬・松尾昭彦(2010)「循環型社会構築に向けてのエコタウン事業」『社会情報学研究』Vol.6, 広島文化学園大学, p.170
- 横山章編(2008)『温暖化対策と経済成長の制度設計』勁草書房, p.226
- 渡辺好章(2001)「循環型経済システム社会における企業マーケティング」『経済経営紀要』第19巻第1号, 城西大学, p.99
- 環境省(1969)『公害白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44>

環境省(1972)『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47>

環境省(1982)『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57>

環境省(1983)『環境百書』, <http://www.env.go.jp/policy/hakusyo/hakusyo.php3?kid=158>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要旨>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종래와 비교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인은 지구의 자연환경이 인류에 의하여 심각할 정도로 매우 많이 오염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규제는 이들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은 주로 세계적으로 환경규제와 지금 당장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규제를 바탕으로 둔 국가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일본의 환경규제 검토를 통하여 한국 환경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A transition and its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tightened recently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It is because the global environment is polluted heavily by human beings to a serious degree. However, today's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aimed at their own industries to safeguard and encourage industrial development. Analysis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worldwide and the responses from industries to resolve the issue at hand. Therefore, the existing studies wer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one's own country rather than from the position of the states subjected to regulations. This paper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through examining the Japanese environmental regulations.